

전남대병원 외래진료 휴진 검토...환자들은 '냉가슴'

전남대·조선대병원 의대교수들 당분간 의료현장 지키면서 사태 관망 수련병원 인턴 임용 무더기 포기...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인턴들이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등 수련병원의 임용을 무더기 포기했다.

전남대병원 의대교수들은 52시간 준법투쟁의 하나로 특정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의대교수들 절반 가량이 대학 비대위에 제출한 사직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의료분과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 인턴 공백= 2일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용 마감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수련생들은 임용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인턴 101명과 조선대병원에서 근무할 인턴 36명 전원이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인턴들은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련을 받지 못해 상반기 인턴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결국 올해 9월 하반기 인턴 수련 신청 전까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의료현장에서는 1년차 인턴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전날 정부가 대통령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를 뒀지만, 전공의들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특정 요일 외래 진료 휴진 될 듯=전남대 의대교수들이 52시간 준법 투쟁을 하기로 함에 따라 외래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전체의대교수 회의에서 52시간

준법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료과마다 특성이 달라 조사기간을 거쳐 병원과 상의한 후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의대 교수들은 "한 달 넘게 장기화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과다에 피로감이 극에 달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신규 외래진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응급·필수·중증 진료는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에 잡혀있는 특정 요일의 외래 진료를 휴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직과 수술 등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외래 진료 뿐이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에서 시행에 들어간 금요일 외래 휴진 사례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남대 의대 전체 교수의 55%(220여명)가 낸 사직서를 바로 병원에 제출하는 것은 유보하기로 했다.

일단 비대위 측에서 사직서를 취합해 보관하고, 의정갈등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사직서 제출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대교수 35.8%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피해 발생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들의 사직서가 들어오면 함께 취합할 계획이다.

만약 공식 사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는 일괄 제출 보다는 개별적 제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조선대 의대 비대위도 전체의대교수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일단 이날까지 총 80명의 조선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휴가나 출장 등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지 못한 교수들을 위해 조선대 의대 비대위에 제출하는 기간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유보중인 사직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기로 했다.

52시간 준법근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힘들

더라도 피로도 누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위험하다는 판단에 52시간을 지키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각하= 법원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오후 의협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

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협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분의 심의에 앞서 심판정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승진 뇌물 의혹' 현직 치안감 재판서 혐의 부인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2일 102호 법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치안감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지난 2022년 1~2월 사건 브로커 성모(65·구속재판 중)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소속 B(56) 경감의 승진 인사 청탁 명목이었다. B씨와 성씨도 제3자 뇌물교부·취득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성씨로부터 인사청탁은 물론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성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성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치안감에게 전달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인사청탁을 할 당시 같이 근무한 상사인 C경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성씨의 청탁과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340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25일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나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60대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나주시 송월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 A씨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석재를 운반하는 용도

로 사용되는 외벽 리프트에서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혜원 기자 hey1@

"수익금 나눠 줄게" 7억 뜯은 40대 구속

투자 사기를 벌여 지인으로부터 7억여원을 뜯은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A(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B씨로부터 88회에 걸쳐 7억여원의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료품 유통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유통업자를 통해 저것과 고춧가루를 싸게 구입해 비싸게 되팔아 차익의 20%를 주

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 등에 탕진했으나, 도박 수익금 등 2억여원을 전달해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장기간 수익금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으며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화방 의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광주 북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욱)는 전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법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선관위는 정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정 후보는 '특정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며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광주지법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달 지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꺾고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